



자연재해 대비와 타조증후군

임준 연구위원

자연재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과 사회의 대응은 과거에 비해 큰 진전 없이, 재난이 발생하면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음. Meyer and Kunreuther(2017)는 자연재해 대비에 있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근본적 원인이 근시안적 사고나 낙관주의와 같은 인간의 심리적 편향에 있다고 보았음.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체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자연과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2017년 11월의 포항지진, 2016년 9월의 경주지진과 10월의 태풍 차바 등 큰 피해를 가져온 자연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평균적으로 매년 약 19건 발생했고, 평균 피해액은 약 6,308억 원에 이르렀음¹⁾(〈표 1〉 참조)
- 지진, 태풍 등에 의한 대형 자연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나 개인과 사회의 대응은 과거에 비해 큰 진전 없이 재난이 발생하면 대책마련에 부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음²⁾
 -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혹자는 타조증후군에³⁾ 빗대어 묘사하기도 함
- 본고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에 직면한 인간이 보이는 행태를 행동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자연재해 대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e-나라지표

2) 아시아경제(2017. 11. 22), “법석 펴다 유아무야...‘도돌이표’ 재난대응”

3) 타조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머리를 땅에 파묻고 위험을 외면한 채 ‘나는 안전하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빗댄 용어인데, 위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함으로써 화를 자초하는 행동을 일컬을 때 사용함

〈표 1〉 자연재해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

(단위: 건, 명, 억 원)

구분	발생 건수	피해규모	
		인명피해	재산피해
2007	14	17	2,806
2008	12	11	654
2009	18	13	3,074
2010	22	14	4,230
2011	13	78	7,376
2012	22	16	10,047
2013	28	4	1,614
2014	23	2	1,696
2015	18	0	313
2016	18	7	2,884
평균	19	16	6,308

주: 재산피해는 2016년도 환산가격 기준

자료: e-나라지표

- Meyer and Kunreuther(2017)는⁴⁾ 자연재해 대비 소홀의 근본적 원인을 근시안적 사고, 망각, 낙관주의와 같은 인간의 심리적 편향(psychological biases)에서 찾았음
- 장래의 혜택보다는 초기투입비용을 중시하는 근시안적 사고와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낙관주의 편향은 자연재해 방지시설에 대한 과소투자를 가져옴
 - 또한 과거 자연재해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망각 편향은 보험의 유용성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갱신하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함
-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방지시설 투자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코네티컷 주의 Shore Up CT 프로그램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홍수대비를 위해 시설물을 보장하는 경우 2.75%의 이자율로 1만~30만 달러의 금액을 15년 장기로 대출해주었음
- 한편, 망각 편향으로 인해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4) Meyer, R. and H. Kunreuther(2017), *The Ostrich Paradox: Why We Underprepare for Disasters*, Wharton Digital Press

-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기계약이나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음
- Meyer and Kunreuther(2017)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체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자연과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kiri**